

목 차

- ◆ 법무부 전경
- ◆ 법무부 기(旗)
- ◆ 법무부장관 근영
- ◆ 법무부 간부 일동
- ◆ 사진으로 보는 2016년 법무부
- ◆ 법무행정 일지
- ◆ 발간사

제 1 장 총 설 / 1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3

제1항 국정 방향 3

1. 국정기조 : 경제부흥 3
2. 국정기조 : 국민행복 3
3. 국정기조 : 문화융성 4
4. 국정기조 : 평화통일 기반구축 4
5. 추진기반 : 신뢰받는 정부 4

제2항 법무행정의 지표 4

1.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5
2.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6
3.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구축 7
4. 창조경제 기반 지원 8
5.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추진 8
6. 안전과 통합의 외국인정책 추진 9

제2절 기구·인원 11

제1항 본 부 11

1. 기 구 11
2. 인 원 14

제2항 소속기관 15

1. 검찰청 15
2. 보호기관 18
3. 교정기관 21
4. 출입국관리기관 23
5. 법무연수원 24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25

제3절 예산과 시설 26

제1항 예 산 26

1. 개 요 26
2. 일반회계 27
3. 교도작업특별회계 31
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32

제2항 시 설 33

1. 개 요 33
2. 국민 편의를 지향하는 법무시설 조성 33
3. 법무시설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상황 33

제 2 장 업무실적 / 35

제1절 기획조정업무	37	5. 지식 공유·확산으로 법무지식행정 활성화	52
제1항 규제개혁 적극 추진	37	6. 고객중심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개선	53
제2항 법무행정개선 추진	38	7. 정보기술 아키텍처(EA)활용 확산	53
1. 국민·현장 중심의 행정제도 개선 및 법무행정서비스 제공 지원	38	8.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정보공동활용 및 대국민 서비스 확대	54
2. 창의 및 직무역량 강화, 조직문화 향상을 위한 변화관리 교육과정 운영	39	제7항 교육과 연구의 내실화	55
3. 조직문화개선을 위한 보람있고 행복한 직장만들기 추진	40	1. 개 요	55
4. 성과중심의 인사시스템 구축	40	2. 교육훈련	56
제3항 성과중심의 법무행정 추진	41	3. 연구활동	64
1. 정부업무평가	41	4. 국제교류	64
2. BSC 제도 및 시스템 운영	45	제8항 홍보업무	65
제4항 대통령 지시사항 추진 상황	46	1. 홍보환경 및 홍보방향	65
1. 개 요	46	2. 유기적인 언론 대응 시스템 구축	66
2. 완료 지시사항(63건)	47	3. 기관장의 언론 소통 활동 강화	67
3. 정상추진 지시사항(32건)	48	4. 온라인 소통 기능 강화	67
제5항 비상대비업무	49	제2절 법무업무	68
1. 을지 연습	49	제1항 법무업무의 기본방향	68
2. 비상대비 계획 수립·실시	49	1. 국민행복 증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 정비	68
3. 법무 시설 방호 실태 및 재난 관리 실태 점검, 안전대진단	50	2. 서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69
4. 재난 대응 안전한국훈련	50	3. 법무자문 기능의 강화	69
5. 예비군·민방위대 운영	50	4.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환경 조성	69
제6항 정보화업무	50	5. 국제법무업무의 전문성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69
1. 정보화업무 추진체계 개선	50	6. 국가송무 수행 역량 강화	70
2.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50	7. 법무분야의 통일준비 실질화 및 북한 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70
3. 법무정보통신망 보안강화를 통한 안전한 업무환경 구현	51	8. 상사 관련 법령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 법제 개선	71
4. 사이버안전체계의 지속적 강화를 통한 사이버 위협 선제적 대응	51	9.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선발제도의 발전도모	72

제2항 국민행복 증진·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령정비 및 서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73	제8항 친일재산송무팀 소송수행	92
1. 개 요	73	1. 개 요	92
2. 주요 법령 정비	73	2. 주요 업무	92
3. 법·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 수렴	74	3. 소송수행 실적	92
제3항 법무자문 기능의 강화	75	제9항 국고손실 환수송무팀 출범	93
1. 개 요	75	1. 개 요	93
2. 법령자문과 유권해석	76	2. 주요 내용	93
3. 주요 법률문제 검토	76	3. 기대효과	93
4. 법무자료 발간	77	제10항 선진적인 국가송무 수행을 위한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구축· 전 소송수행정 확대 및 시스템 유지보수·운영	93
5. 법무자문위원회 운영	78	1. 개 요	93
제4항 신뢰 및 경쟁력을 갖춘 법조 환경의 조성	78	2. 추진 내용	94
1. 개 요	78	3. 기대효과	94
2. 깨끗한 법률시장 조성	78	제11항 법무분야의 통일준비 실질화 및 탈북민 법률지원 강화	95
3. 변호사 징계 및 업무정지명령	79	1. 개 요	95
4. 공증의 활성화 및 적정성 제고	79	2. 통일대비 법률전문가 양성	95
5. 공익법무관 관리의 내실화	81	3.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강화	96
제5항 국제법무업무의 전문성 확충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81	4. 북한인권 개선과 통일법제 심화 연구	96
1. 국제법무교류 지원	81	제12항 상사법의 체계적 정비 등 기업 법제 개선	97
2. 국제거래규범 형성과정에 참여	86	1. 개 요	97
제6항 송무수행의 효율성 향상	88	2. 상사법령 제정 및 개정 현황	97
1. 개 요	88	3. 중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97
2. 소송수행 역량 제고	88	4. 대한상사중재원 이관 및 중재산업 활성화 예산 지원	98
3. 송무업무 실적	90	5. M&A 활성화를 위한 「상법(회사편)」 개정	98
제7항 헌법재판의 효율적 수행	90	6.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제도 운영	98
1. 개 요	90	7. 공익신탁 제도 활성화	100
2. 헌법재판 수행	91		
3. 위헌법률심판	91		
4. 헌법소원심판	91		

8. OECD 기업지배구조 아시아 라운드 테이블 개최	100	3. 형사실체법 정비 추진	132
9. 기업환경지수 개선 사업 추진	101	제5항 검찰역량의 강화	135
10. 전자어음제도 운영 및 관리 감독	102	1. 직제 개편 및 검찰인력의 변동	135
11. 주식·사채 등에 대한 전자증권제도 도입	103	2. 인사관리의 공정·합리화	137
12. 선진 상사법제 관련 연구	103	3. 교육·국외훈련의 확대	138
제13항 공정한 법조인 선발 및 선발 제도의 발전 도모	104	4. 화합과 단결의 조직문화 조성	139
1. 제58회 사법시험 실시	104	5. 효율적인 예산편성·집행	140
2. 제5회 변호사시험 실시	105	6. 검찰시설의 개선	141
제3절 검찰업무	107	제6항 국민의 권익 보호	142
제1항 검찰업무의 기본방향	107	1. 개 요	142
1. 국가·사회기강 확립	107	2. 인권존중의 수사시스템 정착	142
2. 사회적 약자의 권익 향상	108	3. 형사보상의 신속·적정 도모	143
3.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109	제7항 미래형 선진 수사시스템 구축	144
제2항 법과 원칙의 관철을 통한 사회안정 확보	111	1. 기본방향	144
1. 개 요	111	2. 과학수사 운영체제의 확충	144
2.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112	3. 영상녹화시스템 구축	146
3. 공정하고 깨끗한 선진 선거문화 정착	112	4. DNA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DNA감식 연구사업의 수행	148
4. 노사분규 관련 공정한 법집행	113	5.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149
5. 불법집단행동 엄정 대처	114	6. 과학수사 업무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150
제3항 사회·경제질서의 엄정 확립	115	7. 검찰업무 정보화	151
1. 개 요	115	8. 사이버범죄 대응역량 강화	158
2. 부정부패사범의 척결	117	9. 감정·분석기법 특허출원 및 등록	159
3. 쾌적하고 안정된 국민경제생활의 확보	120	제4절 범죄예방업무	162
4. 국제형사 협력 강화	126	제1항 범죄예방업무의 기본방향	162
5. 형집행 지휘·감독	129	1. 범죄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자원 봉사자의 내실화 및 전문성 제고	162
제4항 형사법규의 지속적 정비	130	2.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기반 구축	163
1. 개 요	130	3.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법질서 실천운동	163
2. 형사절차법 정비 추진	131	4. 감호제도의 개선	164

5.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 추진	164	3. 온라인 ‘법교육 전자도서관’ 운영	185
6. 갱생보호사업의 내실화	166	4.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법질서 선진화’ 집중홍보	186
7. 청소년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역량강화	166	제5항 감호제도의 개선	188
제2항 범죄예방 역량강화를 위한 민간 자원봉사자의 전문성 제고	167	1. 개 요	188
1. 개 요	168	2. 감호의 엄정 집행	189
2.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포상 및 격려	168	3.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운영	190
3. 법질서 바로세우기 시민네트워크 사업 활성화	169	4. 치료감호의 효과성 증진 및 지속적 치료체계 마련을 위한 노력	192
4. 범죄예방활동의 내실화 및 전문화	169	제6항 보호관찰 내실화·전문화 추진	194
5. 법사랑위원 봉사활동 실적 및 조직 관리의 체계화	170	1. 개 요	194
6. 법사랑위원 전국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170	2. 보호관찰 실효성 제고	194
제3항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법교육 기반 구축	171	3. 성폭력 등 특정범죄자 관리·감독	196
1. 개 요	171	4. 보호관찰활동 주요 성과	199
2. 법교육의 추진 배경	171	5. 유비쿼터스 보호관찰시스템 구축·운영	200
3. 법교육 연구·추진체제 구축	171	6. 판결전조사·환경조사 활동	203
4. 수요자별 맞춤형 생활법 교재 개발	173	7. 사회봉사명령의 엄정·충실한 집행	205
5. 법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177	8. 수감명령 집행 전문성 강화	206
6. 일상생활 속 법교육 확대	181	9.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법문화 확산	209
7. 법교육 관련 유관단체 협력사업 전개 및 홍보	181	제7항 갱생보호사업의 내실화	209
8. 민간 법교육 지원	182	1. 개 요	209
9. 법체험기관 ‘솔로몬로파크’ 설립·운영	183	2. 출소자 사회복귀 지원역량 강화	210
10. 헌법정신과 가치 교육 강화를 위한 헌법교육 강화 추진단 구성 및 운영	183	3. 갱생보호사업 현황	212
제4항 국민이 행복한 선진 법치국가 건설을 위한 법질서 실천 운동	183	4. 갱생보호사업 저변 확대	214
1.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위한 ‘법질서 실천, 나부터 릴레이!’	183	제8항 청소년비행예방 및 재범방지 역량강화	215
2. 온라인 법교육 테마파크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185	1. 개 요	215
		2. 소년원교육의 내실화·전문화	216
		3. 개방적 인성교육	220
		4. 성공적 사회복귀 지원 강화	221
		5. 주요 교육성과	223
		6. 청소년 비행예방기능 강화	225

제5절 감찰·감사업무	231	4.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248
제1항 감찰업무	231	5. 인권보호 상황 평가	249
1. 개 요	231	제5항 법무부 내 여성·아동관련 정책	
2. 추진상황	231	총괄·조정	250
제2항 감사업무	232	1. 개 요	250
1. 개 요	232	2. 여성·아동 인권보호 강화	250
2. 주요 감사실적	232	3.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여성참여 확대	251
		4. 양성평등 의식 확산	252
제6절 인권업무	234	제6항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북한	
제1항 인권업무의 기본방향	234	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	252
1. 국가인권정책의 총괄·선도	234	1. 개 요	252
2.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234	2.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252
3.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235	제7절 교정업무	254
4.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		제1항 교정업무의 기본방향	254
총괄·조정	235	1. 실효성 있는 사회복귀 정책 시행	255
5. 북한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한		2. 수용질서 확립을 바탕으로 한 다양한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운영	235	교정·교화 프로그램 시행	255
제2항 국가인권정책 총괄·선도	236	3. 수용 환경 및 의료처우 개선을 위한	
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236	시스템 구축	256
2. 차별방지 대책 추진	237	제2항 교정행정 역량 강화	256
3. 국제인권활동 강화	237	1. 주요 정책 이행을 위한 교정역량 집중	256
4. 법의 날 기념식 개최	238	2. 교정공무원 사기증진 및 전문성 강화	257
제3항 범죄피해자 등 사회적 약자의		제3항 수용자 권익 확대·신장	258
인권보호	239	1. 수용자 처우 향상	258
1. 개 요	239	2. 선진 교정환경 조성	264
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240	제4항 수용관리의 효율성 도모	266
3.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구조 강화	243	1. 발전하는 교정행정, 자리 잡는 수용질서	266
제4항 자체 인권보호시스템 구축을 통한		2. 수형자 분류처우 업무의 내실을 위한	
국민의 인권보호 강화	247	지속적인 노력	267
1. 개 요	247	3. 사회지도층 범죄에 대한 가석방 기준 엄격 적용	
2.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 조사 및 구제	247	및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가석방 심사기준 완화	
3.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감독 및 제도 개선	248		268

제5항 수용자 교정·교화의 실효성 제고 269

1. 개 요 269
2. 교육을 통한 수형자 인성계발 269
3. 수형자 사회복귀 촉진 272
4. 교정위원 교화사업 활성화 274

제6항 수형자 사회복귀에 기여하는 교도

- 작업 및 직업훈련 276
1. 개 요 276
2. 교도작업 운영실적 277
3. 교도작업 홍보활동 강화 277
4. 작업장려금 및 조위금·위로금 278
5. 자립형 교도작업 279
6. 외부통근작업 활성화 279
7. 내실있는 직업훈련 실시 280

제7항 첨단 전자경비시스템 구축·운영 282

1. 개 요 282
2. 추진배경 282
3. 전자경비시스템 구축 내용 283
4. 구축 효과 283

제8항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운영 283

1. 개 요 283
2. 추진배경 284
3. 거실문 자동제어시스템 구축 내용 284
4. 구축 효과 285

제8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286

제1항 출입국·외국인정책의 기본 방향 286

제2항 미래 지향적 출입국서비스 구현 287

1. 편리하고 안전한 고품격 출입국심사 서비스 제공 287
2. 해외 우수인재 및 투자확대, 재외동포 포용, 이민행정서비스 개선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 291

3. 외국인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 맞춤형 이민행정 구현 295

4. 국민안전 및 체류외국인 편의를 위한

- 이민행정서비스 제공 295

5. 우범 외국인에 대한 실효적 관리체계 구축 297

제3항 재한 외국인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 이민정책 추진과 사회통합 기반 구축 302

1. 이민자가 행복한 사회통합 기반 구축 302

2. 귀화자의 국민정체성 함양 및 국적

- 신청자 처우 개선 307

3. 효율적 난민심사제도 구축 및 난민

- 신청자 등의 처우 개선 311

4. 외국인정책 추진 및 국제협력 강화 313

제 3 장 주요 법령 정비 / 319

제1절 개 관 321

제2절 법 률 322

제1항 제정 법률 322

1.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22

2.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 관한 법률 323

3.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323

제2항 개정 법률 324

1. 상 법(회사편) 324

2. 검사징계법 324

3. 민 법 325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325

5.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26

6.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 이용 등에 관한 법률 326

7.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327	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342
8. 민사소송법	327	7.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3
9. 범무사법	328	8.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43
10. 외국법자문사법	329	9.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4
11.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330	10.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344
12.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330	11.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345
13. 출입국관리법	331	12. 외국법 자문사법 시행령	345
1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333	13.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5
1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334	14.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46
16.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334	15.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6
17. 중재법	334	16.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46
18. 형 법	335	1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8
19. 형사소송법	336	18.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348
2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36	19. 국가배상법 시행령	348
21. 난민법	337	2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8
2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37	2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9
2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339	22.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9
24.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339	23. 치료감호법 시행령	350
제3절 대통령령	340	2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350
제1항 제정령	340	25.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350
1. 경비교도대 폐지에 따른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0	26.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351
제2항 개정령	341		
1.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341	제4절 총리령 및 법무부령	352
2.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341	제1항 제정 규칙	352
3. 검사정원법 시행령	341	1.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운영에 관한 규칙	352
4.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342		
5. 가석방자관리규정	342		

제2항 개정 규칙	352	25.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1. 자유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	352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363
2.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352		
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 4 장 국회업무 / 365	
시행규칙	353		
4. 법무부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353	제 5 장 법무연표 / 375	
5.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354		
6.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4	제 6 장 통 계 / 389	
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54		
8.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제1절 법무업무 통계 391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355	1. 법무업무	391
9. 외국법자문사법 시행규칙	356	2. 국제법무활동	393
10.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3. 변호사·공증	394
시행규칙	356	4. 국가소송	395
1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357	5. 행정소송	397
12. 외국인보호규칙	357	6. 국가배상	398
13.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57	7. 헌법재판 현황	401
1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8. 제58회 사법시험 관련 통계	402
관한 법률 시행규칙	358	9. 제5회 변호사시험 관련 통계	406
15.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358		
16.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2절 검찰업무 통계 407	
시행규칙	359	1. 검사 수사 사건	407
17.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59	2. 구속영장 발부 등	416
18. 검찰사건사무규칙	360	3. 구속적부심사	417
19. 검찰보존사무규칙	360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417
20.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공무원		5. 형의 집행	419
복제규칙	361	6. 사 면	420
21.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급여규칙	361	7. 형사보상금 지급	422
22. 검찰사건사무규칙	361	8. 마약보상금 지급	422
23. 치료감호법 시행규칙	362		
24.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362		

9. 해외연수	422	10. 국민의 배우자 체류현황	495
제3절 범죄예방업무 통계	424	11. 연도별 국적 처리현황	496
1. 비행소년 선도	424	12. 연도별 외국국적동포 체류현황	497
2. 감호처분	426	13. 연도별 난민심사 및 처리현황	497
3. 보호관찰	436		
4. 갇생보호	449	자 료 / 499	
5. 소년보호 및 분류심사	450		
제4절 인권업무 통계	461	I. 직 제	503
제5절 교정업무 통계	463	II. 훈령·예규 및 주요지시	539
1. 수용자 수용 현황	463	III. 장관 연설문	555
2. 수용자 교육·교화 현황	475	IV. 역대 법무·검찰 간부 명단	624
3. 교도작업 및 직업훈련	479	V. 본부 및 소속기관 직원 명단	637
제6절 출입국·외국인정책업무 통계	483	VI. 인 사	683
1. 연도별 출입국자 현황	483	VII. 국외훈련·출장	684
2. 국적별 외국인 입국현황	484	VIII. 국제교류 현황	685
3. 항구별 외국인 입국현황	486	IX. 상 훈	694
4. 체류자격별 외국인 입국현황	488	X. 위원회 현황	706
5. 국적별 체류외국인 현황	490	XI. 소속기관 및 단체 현황	712
6.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현황	491		
7. 사무소(출장소)별 등록외국인 현황	492	부 록 / 713	
8. 지역별 등록외국인 현황	493	◆ 법무부 본부 기구 변천표	
9. 외국인 유학생 체류현황	494	◆ 법무부 및 소속기관 기구표	

제 1 장

총 설

제1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제2절 기구·인원

제3절 예산과 시설

제 1 장 총 설

제 1 절 법무행정의 기본방향

제 1 항 국정 방향

2016년도는 국민행복과 국가발전이 선순환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열기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기반으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4년째 되는 해였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는 장기적 국가비전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정기조를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및 「평화통일 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경제활성화와 민생안정, 국가안보태세와 위기관리체제 구축, 비정상적인 관행의 정상화 개혁 등 새로운 변화의 미래를 열기 위하여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였다.

박근혜정부는 「희망의 새 시대」 국정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4대 국정기조와 추진기반별로 총 14개의 전략목표를 수립하였으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 140개를 선정·추진하였다.

그 중 우리 부에서 주관 및 협업과제로 추진한 국정기조와 국정과제는 다음과 같다.

1. 국정기조 : 경제부흥

- 1-1-2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체계 선진화
- 1-1-6 투자활성화
- 1-2-24 소비자 권익보호
- 1-2-25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한 공정거래 제도 개선
- 1-2-26 대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행위 근절
- 1-2-27 기업지배구조 개선

2. 국정기조 : 국민행복

- 2-4-51 다문화 가정 적응지원 강화
- 2-4-66 청년고용 활성화
- 2-6-76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 2-6-77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강화
- 2-6-78 학교폭력 및 학생위험 제로 환경 조성
- 2-6-79 먹을거리 관리로 식품안전 강국 구현
- 2-6-8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강화
- 2-7-83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 2-7-102 사회통합적 인권보호 체계 구축

3. 국정기조 : 문화융성

3-10-116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 산업 육성

4. 국정기조 : 평화통일 기반구축

4-12-126 작은 통일에서 시작하여 큰 통일을 지향

5. 추진기반 : 신뢰받는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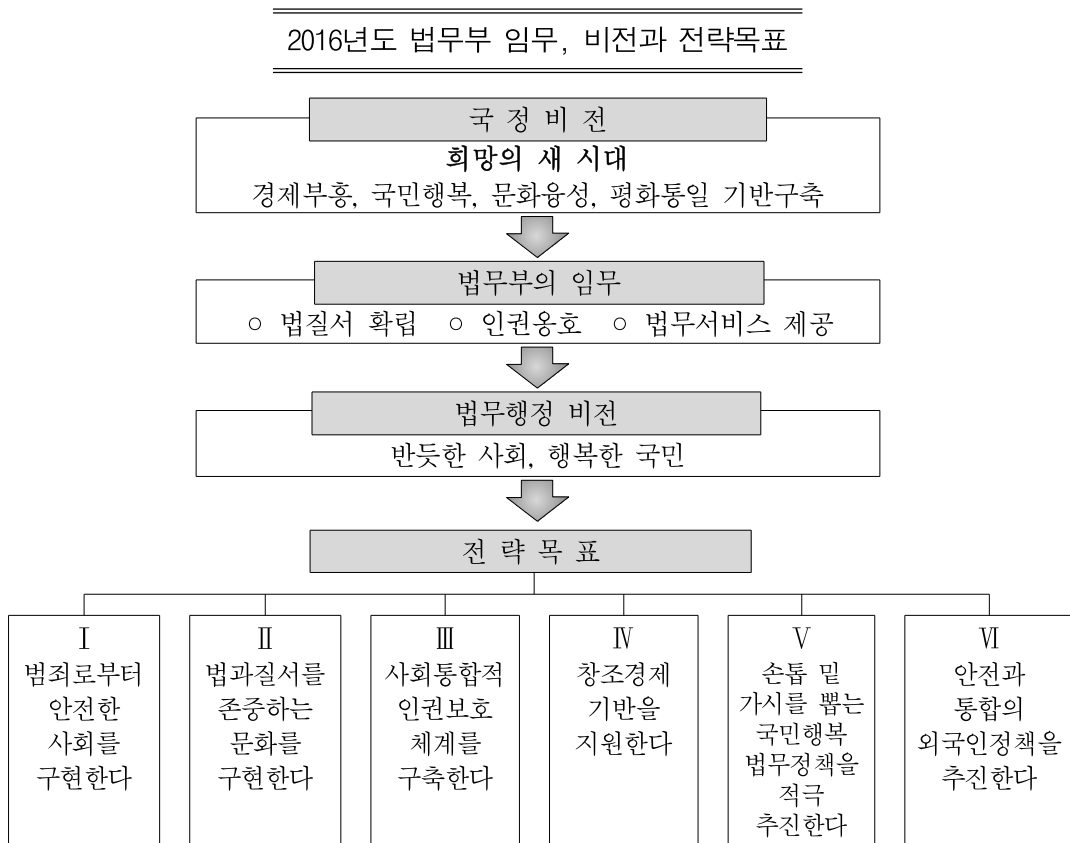
추-14-137 청렴하고 깨끗한 정부 구현

추-14-138 공권력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

추-14-139 지하경제 양성화 등 조세정의 확립

제 2 항 법무행정의 지표

법무부는 국정목표를 충실히 그리고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을 건설하겠다는 비전 아래 ‘법질서 확립’, ‘인권옹호’, ‘법무서비스 제공’의 기본 임무를 바탕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한다’ 등 6대 전략목표와 ‘4대 사회약 근절방안을 보완·심화 추진한다’ 등 15개의 성과목표를 중점 추진하여 「희망의 새 시대」의 초석을 다지는데 이바지하였다. 2016년도 법무부 임무, 비전과 6대 전략목표는 다음과 같다.



1.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구현

가. 4대 사회악 근절방안의 보완·심화

- 1)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한 과학적 지도감독과 전문적 보호관찰 집행 및 체계적인 신상정보 관리로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등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 2) 성폭력 범죄 전담 수사부서 설치 확대, 수사·재판 절차에서의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지속적인 현장 점검으로 가정폭력·학교폭력 근절, 식품안전 중점 검찰청에 식품의약 조사부를 신설하여 식품안전 구현, 여성 대상 강력범죄 사건처리 기준 강화 등 4대 사회악 및 여성 대상 강력범죄 근절 대책 추진
- 3) 검찰·법원과의 협업 및 교육청·일선 학교와 연계하여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 비행 초기단계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재범방지 교육, 소외·위기 청소년 대상 법교육 운영을 통한 지역 사회 내 청소년 비행예방 기능 강화

나. 국민불안 야기범죄에 입체적으로 대응

- 1) 불법도박, 마약류범죄 등 중독범죄 강력 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간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및 국제공조 강화, 마약수사전담팀 단속활동 전개 등 중독범죄 대응체계 구축
- 2) '서민생활 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중심으로 불법 사금융·채권추심, 불법 다단계·유사수신, 보이스피싱, 서민 상대 갈취 사범, 불법 사행행위, 개인 정보 불법 유통·활용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처벌 강화

- 3)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 국민의 범죄안전 체감도 제고
- 4) 불법체류자 단속, 신분세탁자 등 기획조사, 외국인 밀집지역 재지정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통한 우범외국인 등 관리 강화로 국민이 안전한 사회 구현

다. 맞춤형 처우를 통해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

- 1) 수형자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수형자 내면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인문학 교육 등 집중인성 교육, 중간처우 및 사회적 처우 등 맞춤형 교정·교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실질적인 사회복귀를 도모
- 2) 수형자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여 직업훈련생의 실무능력을 제고하고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 소자본 창업교육 등으로 출소예정자의 구직 활동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
- 3) 수형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개별 처우를 위해 수형자 개별처우프로그램 및 분류처우 업무지침 개정 방안을

- 마련하고 개별처우 효과성 측정을 위한 처우만족도 조사 실시로 개선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등 맞춤형 개별처우의 내실화 노력
- 4) 교정청별 정신보건센터 설치, 교정시설 원격진료시스템 추가 구축, 외부 전문 기관에 의한 건강검진 등 수용자 의료 처우 실시 확대와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 등의 응급상황 대처능력 향상으로 체계적인 교정시설 의료 지원 시스템 구축
 - 5) 교정시설 신축 및 리모델링 추진, 수용거실 난방방식 개선 등 수용자 인권향상을 위한 수용환경 개선
 - 6) 소년원생의 특성에 맞는 교육 및 처우, 학업연계, 취업알선, 사후지도,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출원 후 재비행 방지 및 안정적 사회복귀 실현
 - 7) 치료감호 의료인력 충원, 치료프로그램 내실화로 정신질환, 약물중독,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한 치료환경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치료시스템 정착
 - 8) 보호관찰 대상자의 개별적 범죄유발 요인에 대응, 긍정적인 행동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 동기강화 면담 등을 통해 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건전한 사회복귀 촉진
 - 9) '출소자 허그 후원의 날' 행사 개최, '출소자 고용 우수 허그 기업 인증' 등을 통한 출소자 고용 참여기업의 확대 도모 등 갇생보호사업 추진

2.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 구현

가. 법질서 확립으로 준법문화 구현

- 1) 안보위해사범 수사역량 제고, 반 국가 활동사범, 이적표현물 인터넷 게시 행위 단속 등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엄정 대응하고, 테러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
- 2) 폭력행위를 부추기는 전문 시위꾼과 외부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 및 엄정한 처벌 등 불법 집단행동에 원칙 있는 법집행으로 법질서를 존중하는 사회 구현
- 3)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 선관위 고발 전 긴급 통보 제도, 선거사범 양형기준 정비 등으로 바르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
- 4) 국외도피사범 여권무효화조치, 강제 추방, 범죄인인도청구 등 집중송환 추진, 국제공조체제 강화 등 국제 협력을 통한 법집행 공정성 강화
- 5) 검사·공익법무관의 국가송무 직접 수행률 확대·송무 지도점검 실질화를 통한 국가소송 수행 역량 강화, 국가 송무정보시스템 확대 운영을 통한 국가송무의 대응력 향상
- 6) '헌법토론대회', '모의재판 경연대회' 등 참여형 법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다양한 법교육 콘텐츠 개발, 체험형 법교육 테마파크 '솔로몬로파크' 및 법사랑 사이버랜드 확대 운영 등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준법의식 함양
도모

- 7) 대학생 자원봉사단인 '법사랑 서포터스' 운영, '배려, 법질서 실천운동' 등을 통해 준법문화 확산 및 법질서 확립 도모

법질서 준수 문화 정착

- 7) 감찰·감사인력의 분야별 전문교육, 상시 예방감찰 활동 강화, 비정상적 관행과 부조리를 선제적으로 발굴·개선하는 등 감찰·감사 역량 강화를 통한 내부 비위 근절 및 예방

나. 비정상적 관행, 부조리 정상화

- 1) 공공기관·인프라 정상화를 위해 공기업비리, 국가보조금 비리, 방위사업 비리 등을 중점 수사하여 비정상적 관행, 부조리의 정상화 추진
- 2) 법조브로커, 사이버 언론사범 등에 대한 단속활동 강화로 전문 직역 비리 척결
- 3) 법조브로커 근절을 위한 변호사제도 개선을 위해 T/F 구성·운영,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 운영 및 「변호사법」 개정안 마련 등 제도 개선 추진
- 4)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구성하여 국가상대 부패·비리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손실을 철저히 환수하여 믿음의 법치 실현
- 5) 클린피드백 시스템으로 수사 과정 및 단속 결과를 분석하여 제도 개선 사항을 발굴, 정책에 반영하는 등 부패 유발 요소 차단
- 6) 사회적 지위, 지식 또는 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정보·재력 등을 악용하여 저지르는 '사회지도층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공정한 법집행을 통해

3. 사회통합적 인권보호체계 구축

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인권사각지대 해소

- 1) 「국가인권정책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국제인권규범」의 국내 이행, 국제인권기구와의 협력 등 국제인권활동을 강화하며, 인신보호관 제도를 도입하여 수용시설의 위법수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인권사각지대 해소
- 2) 법무부 구금보호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여 인권침해를 사전 예방하고, 인권침해사건을 신속하게 조사 분석하여 구제하는 시스템 강화

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여성·아동 인권 강화

- 1) 피해자 보호기금의 운용방향을 설정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인 스마일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한 피해자 상담, 의료·경제·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
- 2) 법무부 소관 여성·아동 관련 법령에 대한 지속적 점검 및 개선방안 마련, 법무·검찰의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 교육 실시 등 여성·아동
인권 강화 노력

4. 창조경제 기반 지원

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저해사범 수사 강화

- 1) 금융·증권범죄 등 경제질서 저해 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건전한 투자환경 조성
- 2) 유관기관 정보공유와 수사 협력 체계를 통해 역외탈세 등 탈세사범에 대해 적극 대응하는 등 지하 경제 양성화에 기여
- 3) 기술유출·지식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해 합동수사체계를 구축, 지속적으로 단속 하여 국내 산업기술, 문화콘텐츠 산업 보호 및 지식재산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나. 경제활성화를 위한 제도 및 통일준비 지원

- 1)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9988 중소기업법률지원단의 무료 법률상담·법률지원', '산업단지 법률 지원 전담변호사' 제도 등 맞춤형 법률서비스 강화
- 2)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한 외국법자문사 관리감독 시스템 운영,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지원 사업 진행 등 법률 서비스의 국제경쟁력 제고

- 3) 통일대비 법무인프라를 구축하여 통일단계의 법적 혼란을 예방하고,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법령정비와 법적자문 지원 강화

5. 손톱 밑 가시를 뽑는 국민행복 법무정책 추진

가. 법의 문턱을 낮추는 국민행복 법률 복지 확산

- 1) 변호사의 재능기부를 토대로 한 '마을변호사' 제도를 활성화하여 주민들의 법률문제를 상담해주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안내해주는 등 틈새 없는 법률복지 구현
- 2) 법률복지 취약계층 중심으로 '이동 법률상담', '법률홈닥터' 등 법률지원을 강화하고 금융소외자의 경제적 자활을 위한 법률구조 강화
- 3)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맞춤형 법률교육 및 '북한이탈주민 법률지원 변호인단'을 활용한 법률 지원
- 4) 수요자 중심의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사회봉사정책 패러다임을 일반 국민에게 신청을 받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 제공

나. 법령정비 사업 내실화

- 1) 이혼소송에서 자녀의 진술청취 의무화

- 등 「가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미성년 자녀 보호와 권익 강화 추진
- 2) 집합건물 관리비 공개 근거 마련, 관리인의 보고의무 강화 등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집합건물 관리단 운영의 투명성 제고
 - 3) ‘민음의 법치 법령경연 학술대회’ 등을 통해 법령정보 국민소통채널 구축
 - 4) 인도집행증서 작성대상 확대, 화상 공증제도 도입, 공증서류 전자보관 시스템 구축 등으로 공증을 활성화 하고 선진화시킴으로써 분쟁의 사전 예방적 기능 강화
 - 5) 알기 쉬운 「형법」, 「형사소송법」 개정 추진으로 국민이 쉽게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형사특별법의 정비를 추진하는 등 선진형 형사사법체제 정비

다. 국민과의 소통 및 정보공유 강화

- 1) 정보공개 담당자 교육 및 관련 외부 기관과의 정책교류 등으로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사전에 공표함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기여
- 2) 서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무정책 등 다양한 법무정책을 SNS 온라인 매체를 통해 효과적으로 홍보하여 국민 참여와 만족도 제고

라. 고객중심의 법무행정 지원역량 강화

- 1) IT기술을 활용한 전자민원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영상 회의, 차세대 법무포털시스템 구축,

우수지식의 공유 등으로 협업 업무 환경을 조성

- 2) 법무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자연재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비상대비 계획을 보완·발전
- 3) 법무시설건축협의회 운영, 시설 관리 실태점검을 통한 법무시설의 기능향상과 안전성 제고
- 4) 변호사시험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시험 관련 출제오류로 인한 이의신청을 예방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로 응시생의 편의 증진과 우수 법조인 양성 지원
- 5) 인터넷 화상접견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수형자 가족의 교정기관 방문 부담 경감 및 접견기회 확대로 수형자 가족관계 회복을 지원
- 6) 4대악 근절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전자감독 전담 직원 워크숍 등 보호조직의 역량강화 및 직원 전문성 제고

6. 안전과 통합의 외국인정책 추진

가. 미래지향적 출입국서비스 구현

- 1) 증가하는 출입국자에 대한 고품격 이민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는 한편, 최첨단의 IT기술을 출입국심사

절차에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고
친절한 출입국 심사서비스 구현

- 2) 해외 우수인재 및 투자 유치와 관광
활성화 지원을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는 등 수요자 친화적 체류
환경을 조성, 체류만족도 향상과
관광 입국자 수 증가에 기여
- 3) 중국 복수비자 대상 및 체류기간
확대, 10년 유효한 복수비자 신설
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활성화를
위한 맞춤형 민원 서비스 제공
- 4) 수요자 중심의 이민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기 위해 민원인 불편 사항과 불합리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고 IT기술을
활용한 신속한 이민행정서비스를 제공
하여 사회적비용 절감 효과 창출
- 5) 출입국·외국인 정책에 대해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로 정책
수요자의 접근성을 향상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 및 신뢰도 제고

나. 재한 외국인에게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이민정책 추진과 사회통합 기반 구축

- 1) 이민자가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
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이민자의 정착
단계에 따른 맞춤형 사회통합정책을
마련하고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을
개선하는 등 체계적인 사회정착을 지원
- 2) 외국인정책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
수렴과 범정부 차원의 정책 추진
으로 투자자 및 우수인재를 유치
하고, 이민자 정착 지원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더불어 사는 사회환경
조성
- 3) 귀화적격심사 시 국민정체성 평가를
강화하고 국적심사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국적 신청자의 편의 증진
- 4) 난민위원회 확대 운영 등으로 공정
하고 효율적인 난민인정심사 인프라를
구축하고 난민신청자의 사회적응 및
처우 개선에 기여

제 2 절 기 구 · 인 원

제 1 항 본 부

1. 기 구

본부 기구는 2016. 12. 31. 현재 2실 3국 2본부 9관 47과로 편성되어 있다.

가.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기획검사, 기획재정담당관, 창조행정담당관, 시설담당관, 정보화담당관, 형사사법공동시스템운영단을 두고 있으며 법무부 주요 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 예산의 편성 및 결산, 당정협의, 국회업무, 부내 행정개선 총괄·지원 및 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사무, 조직 및 정원의 관리, 법무시설 조성, 법무행정 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과 국가 비상사태 대비업무,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의 총괄·조정, 형사사법공동시스템 운영, 국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나. 법무실

법무실은 법무심의관, 법무과, 국제법무과, 국가송무과, 통일법무과, 상사법무과, 법조인력과를 두고 있으며, 대통령·국무총리·

행정각부에 대한 법령자문 및 유권해석, 국내외 법무자료의 조사연구와 국제법무관계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변호사 및 공증인 업무의 감독, 공익법무관의 관리,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의 지휘·감독, 국가배상·헌법재판 관련업무, 국고손실 환수송무 업무, 남북대화·교류협력 관련 법적지원,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법조윤리시험 관장 및 법조인 양성제도의 조사·연구 및 개선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다. 검찰국

검찰국은 검찰과, 형사기획과, 공안기획과, 국제형사과, 형사법제과를 두고 있으며, 검찰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검찰권 행사에 대한 일반적 지휘·감독, 검찰공무원의 인사, 검찰청 정원 배정, 검찰예산의 편성 및 배정, 범죄정보의 수집·분석 및 범죄의 예방과 단속을 위한 대책 수립, 형 집행의 지휘·감독, 형사보상금 지급사무의 지휘·감독, 마약류 보상금 및 국가보안유공자 상금 지급 심의 및 결정 사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사면·감형·복권에 관한 사무, 주한미군 지위협정에 의한 재판관할권 행사문제,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사무, 보안관찰처분에 관한 결정·집행 및 피보안관찰자에

대한 사후관리, 형사관계법령의 입안 등의 업무도 맡고 있다.

라. 범죄예방정책국

범죄예방정책국은 범죄예방기획과, 법질서 선진화과, 보호법제과, 소년과, 보호관찰과, 특정범죄자관리과를 두고 있으며 범죄예방 행정과 법질서 실천 운동 및 법교육 관련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소년 비행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한다. 소년원생에 대한 적정한 분류처우와 학과교육, 성격 교정 및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을 실시하고, 법원의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감명령·이수명령·위치추적 전자감독·성충동 약물치료·성폭력 범죄자의 등록·관리 및 임시퇴원·가석방된 보호관찰 대상자를 지도·원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출소자 및 퇴원생에 대한 숙식제공·주거지원·직업훈련·취업지원 등 사회 복귀를 돕는 갱생보호업무와 법질서 준수의식 고양을 위한 캠페인 전개, '법사랑 사이버랜드' 운영, 법교육 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 법교육 교재·프로그램 보급, 법교육 전문인력 양성 연수지원 등 선진 법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마. 감찰관실

감찰관실에는 감찰담당관, 감사담당관이 있으며, 감찰관은 장관을 보좌하여 사정업무,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법무부 및 검찰청에 대한 감사(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건의 수사·소추·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것은 제외), 법무부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다른 기관에 의한 법무부 및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공직자윤리 위원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에 관한 조사·처리,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사항, 병역사항의 신고 및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검찰청 소속 공무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운영 지원, 그 밖에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를 담당하고 있다.

바. 인권국

인권국은 인권정책과, 인권구조과, 인권 조사과, 여성아동인권과를 두고 국가인권 정책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국가인권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업무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정부보고서 및 답변서의 작성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범죄피해자지원법인 및 법률구조법인의 관리·감독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무행정 수행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예방 및 구제, 법무부 공무원의 인권 교육, 검찰국·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교정본부·범죄예방정책국 산하기관에 대한 인권 보호 상황평가, 법무부 내 여성·아동 관련 정책의 총괄·조정, 여성·아동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한 다른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 교정본부

교정본부는 교정정책단에 교정기획과, 직업훈련과, 사회복지과, 복지과를 두고

있으며, 보안정책단에 보안과, 분류심사과, 의료과, 심리치료과를 두고 있다. 교정본부는 교정행정 기획, 조직·인사·예산·복무 감독·상훈·홍보·국제관계업무, 교정관련 법령 정비, 교도작업 운영, 취업·창업 지원, 수용자 교육 기획, 출소예정자 사회 적응 지원, 수용자 수용·처우·석방·접견, 참관, 이송, 가석방, 분류처우, 수용자 보건위생, 의료 및 약제, 질병예방, 수용자 청원, 인권 및 소송, 수용자 심리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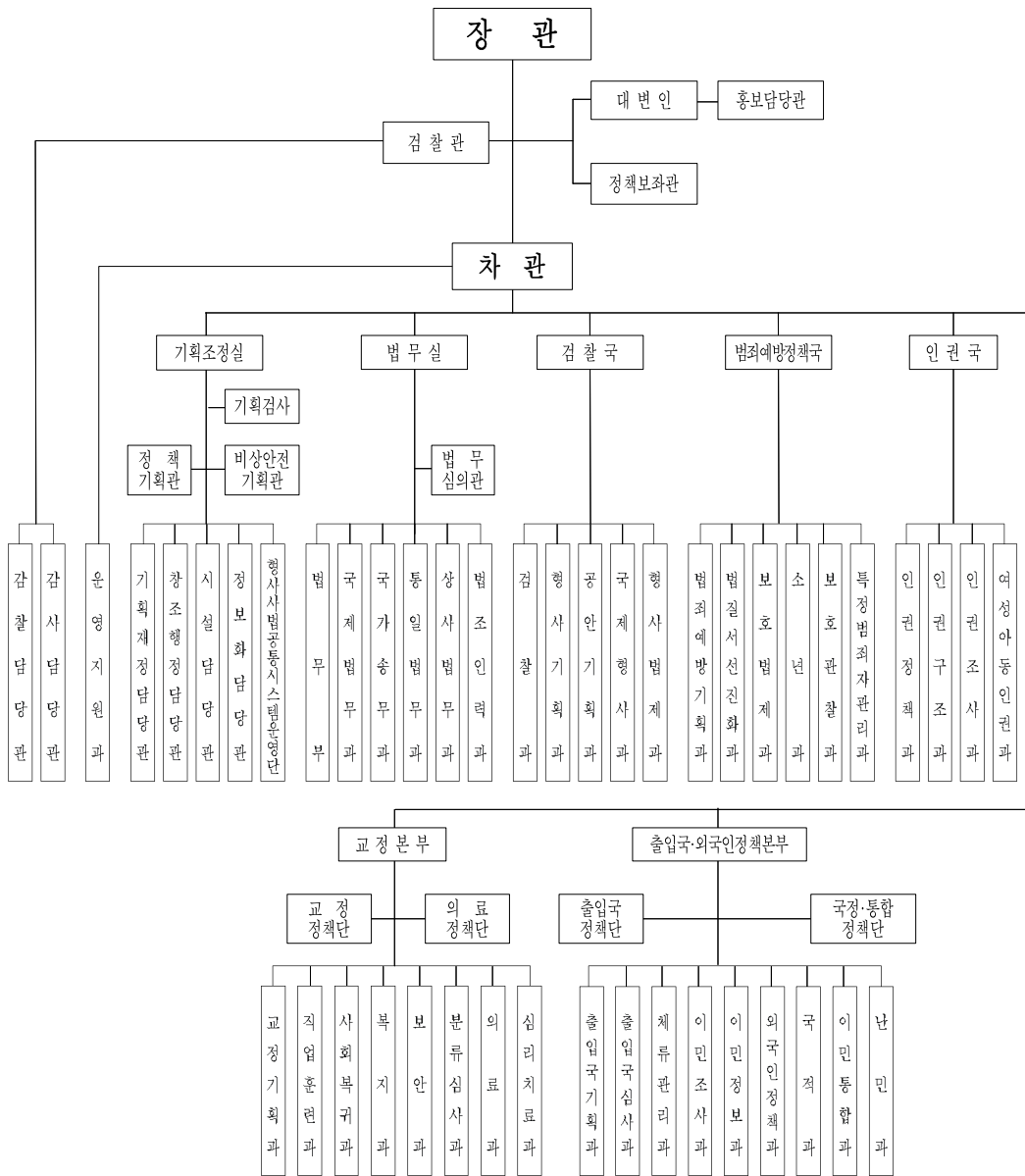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정책단과 국적·통합정책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 정책단은 출입국기획과, 출입국심사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이민정보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적·통합정책단은 외국인정책과, 국적과, 이민통합과, 난민과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출입국관리 조직·인사·예산·복무관리, 소관법령의 입안 및 외국인정책 계획 수립 및 총괄, 내·외국인 출입국심사 및 남북 왕래자의 출입심사, 사증 및 사증발급 인정서의 발급 심사, 출입국규제, 외국인의 체류자격부여

등 각종 체류허가, 외국인등록, 출국권고·출국명령·강제퇴거명령 및 강제퇴거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관련 조사, 외국인 동향조사, 귀화·국적회복·국적판정 등 국적취득, 국적상실 및 이탈, 난민의 인정 또는 불인정, 재한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정책 총괄, 다문화(多文化)의 이해 증진에 관한 정책, 외국 국적동포의 입국·체류·취업자격부여에 관한 정책 총괄, 외국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담당기관과 협력강화를 통한 재외국민의 출입국·체류 지원, 출입국·외국인정책 행정에 관한 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외국인정책 관련 통계의 작성 및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 기 타

그밖에 대변인실은 법무부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 수립 및 조정,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점검, 법무정책에 관한 각종 홍보상황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운영지원과는 보안, 예산의 집행 및 국유재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6. 12. 31. 현재 법무부 기구는 <표 1>과 같다.

〈표 1〉 본 부 조 직 도



2. 인 원

아동 인권보호 담당 인력, 검찰 전문성 제고 인력, 심리치료과 신설 인력 등 15명을 증원

하고, 통합정원제도 운영 계획에 따라 정원 5명을 감축하여 2016. 12. 31. 현재 본부 정원 666명 및 현원 658명으로 직종별 정원 및 현원은 <표 2>와 같다.

2016. 1. 21.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방위사업수사부를 신설하고, 부산지방검찰청 등에 방위사업 비리 수사와 관련된 사무를 분장하며, 성폭력·가정폭력·아동학대 등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대구 지방검찰청 및 광주지방검찰청에 여성아동 범죄조사부를 각각 신설하였다.

2016. 2. 29.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찰청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검찰청의 5급 1명을 4·5급 1명으로, 연구사 3명을 연구관 3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고, 고등 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 포함)의 5급 1명을 4·5급 1명으로, 6급 12명을 5급 12명으로 각각 상향 조정하였다.

2016. 5. 10. 개정된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검찰청에 범죄수익환수 및 사이버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1명, 6급 2명, 7급 2명)을 증원하고,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및 형사조정과 디지털 포렌직

(Digital Forensics) 기법을 활용한 압수 및 분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22명(6급 3명, 7급 9명, 8급 7명, 기록연구사 3명)을 증원하는 한편, 수원지방검찰청 안양 지청에 사무국 및 사건과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8급 정원 1명을 5급 정원 1명으로 상향 조정하며, 대검찰청 인력 1명(5급 1명)을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으로 재배정하였다. 또한, 「검사정원법」의 시행에 따라 2016년도에 증원된 검사 80명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에 수사 및 공판 참여 등에 필요한 인력 76명(6급 22명, 7급 26명, 8급 15명, 9급 13명)을 증원하는 한편, 정부의 통합정원제 운영에 따라 국정과제·협업과제 등의 추진 인력을 대검찰청 4명(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9급 1명), 고등검찰청 및 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71명(5급 2명, 6급 13명, 7급 16명, 8급 11명, 9급 29명) 감축하였다.

2016. 12. 31. 현재 검찰공무원의 정원 및 현원은 <표 4> 내지 <표 6>과 같다.

〈표 4〉

검찰청 소속 공무원의 정원

(단위 : 명)

구 분	계	검 사	일반직	별정직
인 원	10,336	2,112	8,223	1

〈표 5〉 검사의 직위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위	정 원	현 원
계	2,112	1,961
검 찰 총 장	1	1
고 등 검 사 장 급	7	7
대 검 검 사 급	31	29
검 사	2,073	1,924

〈표 6〉 검사 외의 검찰청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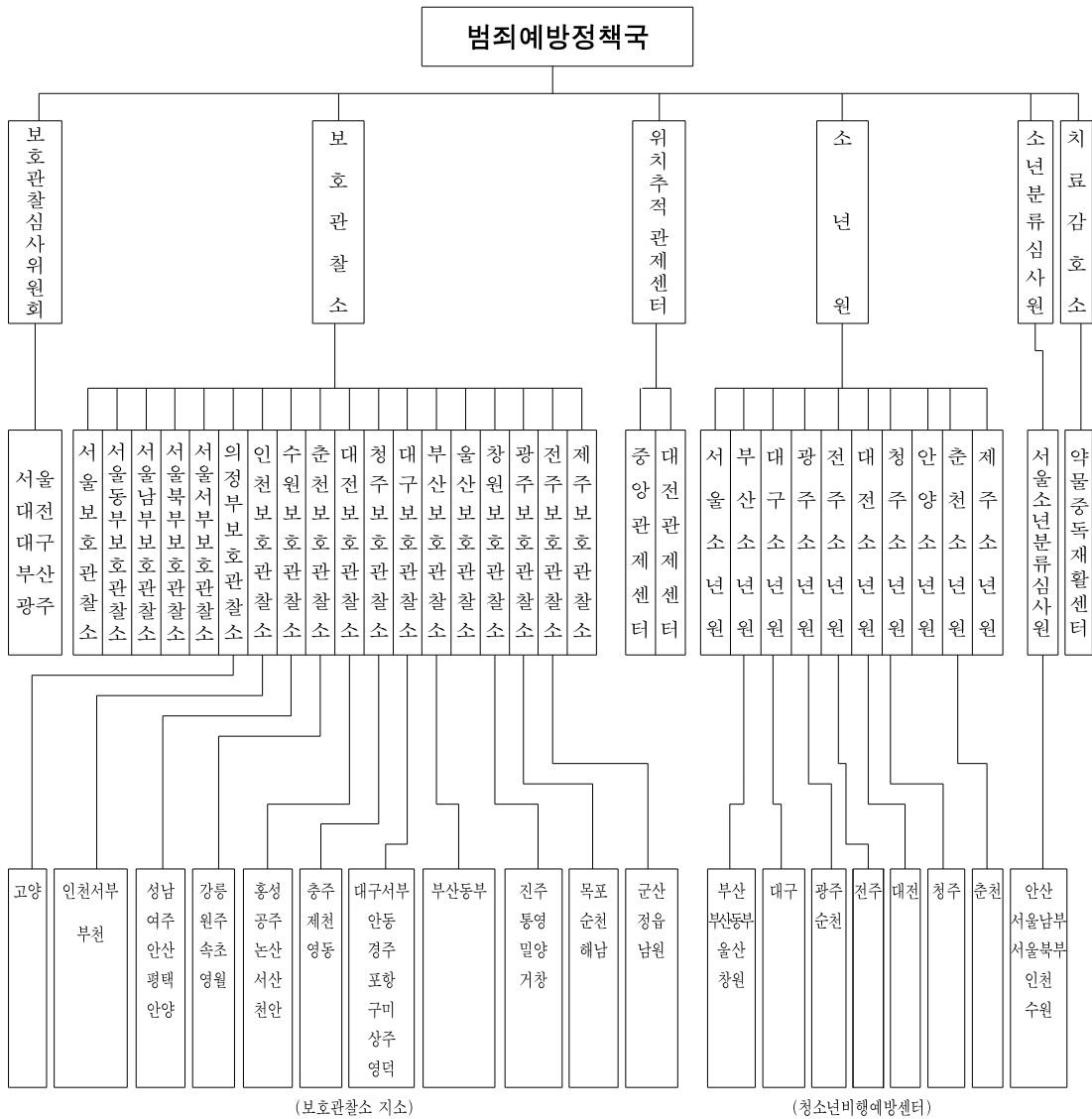
직 급	정 원	현 원
계	8,224	7,893
고 위 공 무 원 단	25	21
검 찰 부 이 사 관	15	15
검 찰 수 사 서 기 관	181	168
임 기 제 서 기 관	1	1
검 찰 사 무 관 · 수 사 사 무 관	453	377
검 찰 사 무 관 · 마 약 수 사 사 무 관	6	6
검 찰 주 사	1,401	1,406
검 찰 주 사 보	1,777	1,660
검 찰 주 사 보 (속 기 사)	28	24
검 찰 서 기	1,052	958
검 찰 서 기 보	814	721
마 약 수 사 직	281	249
전 산 직	227	221
시 설 · 공 업 직	81	80
사 서 직	4	3
임 업 직	2	2
운 전 직	273	267
방 호 직	157	155
위 생 직	1	2
관 리 운 영 직	1,383	1,500
연 구 직	57	54
전 문 경 력 관	4	3
별 정 직	1	0

2. 보호기관

보호기관은 2016. 12. 31. 현재 18개 보호관찰소, 38개 보호관찰지소, 2개 위치추적관제센터, 5개 보호관찰심사위원회, 10개

소년원, 1개 소년분류심사원, 16개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개 치료감호소, 1개 약물중독재활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및 현원은 <표 8> 내지 <표 10>과 같다.

<표 7> 보호관찰·소년보호기관 조직도



〈표 8〉 보호관찰심사위원회·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계	정 원	현 원
고 위 공 무 원 단	1,525	1,514
고 위 공 무 원 단 (임 기 제)	1	1
부 이 사 관 또 는 서 기 관	2	2
서 기 관 또 는 보 호 사 무 관	4	4
서 기 관 (임 기 제)	28	27
보 호 사 무 관 또 는 전 산 사 무 관	3	3
보 호 사 무 관 또 는 전 산 사 무 관	6	6
보 호 주 사 보 또 는 전 산 주 사 보	188	186
보 호 주 사 보 또 는 전 산 주 사 보	1	1
보 호 주 사 보 또 는 전 산 주 사 보	249	250
전 산 주 사 보	2	3
보 호 주 사 보 또 는 전 산 주 사 보	314	312
보 호 주 사 보 또 는 전 산 주 사 보	4	3
보 호 주 사 보 또 는 전 산 주 사 보	335	328
공 업 서 기 보	4	5
보 호 서 기 보	301	288
공 업 서 기 보	1	1
운 전 서 기 보	63	63
방 호 서 기 보	15	16
관 리 운 영 직	4	15

〈표 9〉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청소년비행예방센터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계	정 원	현 원
고 위 공 무 원 단	807	785
서 기 관 또 는 보 호 사 무 관	2	2
기 술 서 기 관	16	16
서 기 관 또 는 보 호 사 무 관	9	9
보 호 사 무 관 또 는 의 무 사 무 관	9	9
보 호 사 무 관 또 는 의 무 사 무 관	44	43
의 무 사 무 관	6	6
보 호 사 무 관 또 는 의 무 사 무 관	2	1
보 호 주 사 보 또 는 전 산 주 사 보	88	89
공 업 주 사 보	3	3
시 설 주 사 보	1	1
간 호 주 사 보	3	3
보 호 주 사 보	150	146
공 업 주 사 보	3	4
의 료 기 술 주 사 보	1	1
간 호 주 사 보	12	10
보 호 서 기 또 는 간 호 서 기	149	147
보 호 서 기 또 는 간 호 서 기	1	1
공 업 서 기	5	5
시 설 서 기	2	2
식 품 위 생 서 기	7	4
보 호 서 기 또 는 식 품 위 생 서 기	2	2
보 호 서 기 또 는 식 품 위 생 서 기	143	134
공 업 서 기 보	8	6
식 품 위 생 서 기 보	4	5
보 호 서 기 보	3	0
운 전 서 기 보	23	23
조 리 서 기 보	54	52
방 호 서 기 보	21	22
간 호 운 영 서 기 보	3	4
전 기 운 영 서 기 보	1	1
열 관 리 운 영 서 기 보	11	11
사 무 운 영 서 기 보	1	3
전 문 경 력 관 나 군 (직 업 훈 련 담 당)	20	20

〈표 10〉

치료감호소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389	367
고 위 공 무 원 단	2	2
부 이 사 관 또 는 서 기 관	1	1
부 이 사 관 또 는 기 술 서 기 관	1	1
서 기 관	1	1
기 술 서 기 관	13	10
보 호 사 무 관	2	2
보 호 사 무 관 또 는 행 정 사 무 관	2	2
의 무 사 무 관	2	1
약 무 사 무 관	1	0
간 호 사 무 관	2	2
보 건 사 무 관 또 는 의 료 기 술 사 무 관	1	1
보 호 주 사	3	3
보 호 주 사 또 는 행 정 주 사	5	5
약 무 주 사	1	1
간 호 주 사	22	22
보 건 주 사 또 는 의 료 기 술 주 사	4	3
의 료 기 술 주 사	1	1
보 호 주 사 보	5	4
보 호 주 사 보 또 는 행 정 주 사 보	4	4
약 무 주 사 보	1	1
간 호 주 사 보	41	34
간 호 조 무 주 사 보	4	4
보 건 주 사 보 또 는 의 료 기 술 주 사 보	2	2
의 료 기 술 주 사 보	2	2
시 설 주 사 보	1	1
전 산 주 사 보	1	1
공 업 주 사 보	1	2
방 송 통 신 주 사 보	1	1
보 호 서 기	6	5
보 호 서 기 또 는 행 정 서 기	5	5
공 업 서 기	2	1
간 호 서 기	41	39
의 료 기 술 서 기	3	3
보 호 서 기 보 또 는 행 정 서 기 보	2	2
식 품 위 생 서 기 보	1	2
시 설 서 기 보	1	0
간 호 조 무 서 기	11	11
공 업 서 기 보	1	1
운 전 서 기 보	3	3
간 호 조 무 서 기 보	130	129
조 리 서 기 보	18	14
방 호 서 기 보	13	12
관 리 운 영 직	8	11
전 문 경 력 관	17	15

3. 교정기관

2016. 12. 31. 현재 법무부 산하 전국의 교정기관은 중간 감독기관인 4개의 지방 교정청과 38개의 교도소, 11개의 구치소, 3개의 지소 등 총 56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0. 12. 1. 개칭한 국내 최초 민영

교도소가 운영되고 있다. 소속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정원은 15,841명이며, 2016. 12. 31. 현재 15,727명의 교정공무원이 수용관리와 수용자 교정교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2016년 말 현재 산하 교정기관의 교정공무원 현황은 <표 12>와 같다.

〈표 11〉

교정기관 조직도



〈표 12〉

교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15,841	15,727
고 위 공 무 원	19	17
부 이 사 관(교정)	7	7
서 기 관(교정)	97	87
교 정 관	340	322
교 감	1,410	1,377
교 위	1,736	1,719
교 사	5,354	5,313
교 도	5,810	5,857
의 료 직	255	226
식 품 위 생 직	54	54
기 술 직 · 기 타	256	253
운 전 직	262	258
전 문 경 력 관	119	116
관 리 운 영 직	118	117
기 록 연 구 사	4	4

4. 출입국관리기관

2016. 12. 31. 현재 법무부 소속 출입국
관리기관은 19개 출입국관리사무소와 2개

외국인보호소, 1개 센터 및 24개 출장소로
구성되어 있다. 출입국관리기관의 공무원
정원은 1,946명이며, 현원은 1,936명이고,
세부현황은 <표 14>와 같다.

<표 13>

출입국관리기관 조직도



(19개 사무소, 2개 보호소, 1센터, 24개 출장소)

〈표 14〉 출입국관리기관 소속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1,946	1,936
고 위 공 무 원	3	3
부 이 사 관	3	3
서 기 관	24	24
출 입 국 관 리 사 무 관	99	93
출 입 국 관 리 주 사	325	324
출 입 국 관 리 주 사 보	507	502
출 입 국 관 리 서 기	513	513
출 입 국 관 리 서 기 보	369	374
전 산 직	30	30
의 무 직	3	1
간 호 직	3	3
관 리 운 영 직 군 등	67	66

5.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은 검사, 검찰직·보호직·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기획부, 교정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교정연수부, 연구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위원,

로스쿨 출신 신입검사 교육·로스쿨 지원·국제교류,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속 특별사법 경찰·국가송무 수행자 등의 교육을 맡고 있는 용인분원, 원내 일반 운영을 총괄하는 총무과로 구성되어 있다. 2016. 12. 31. 현재 직급별 정·현원은 <표 15>와 같다.

〈표 15〉 법무연수원의 직급별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구 분	정 원	현 원
계	131	157
검 사	14	21
고 위 공 무 원	6	2
서 기 관 · 검 찰 수 사 서 기 관 등	7	6
행 정 사 무 관 · 교 정 관 등	19	24
행 정 주 사 · 교 감 등	26	29
행 정 주 사 보 · 교 위 등	22	38
검 찰 서 기 · 교 사 등	25	32
행 정 서 기 보 · 운 전 서 기 보 등	12	5

6. 북한인권기록보존소

「북한인권법」이 시행되고(2016. 9. 4.), 북한인권 기록보존소가 설치되었고, 2016. 그 후속조치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2016. 10. 11.)됨에 따라 인권 12. 31. 현재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정·현원은 <표 16>과 같다. 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소속기관으로

<표 16>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정원 및 현원 (단위 : 명)

직 급	정 원	현 원
계	12	7
서 기 관 · 검 찰 수 사 서 기 관 또 는 검 사	1	1
서기관·검찰수사서기관·행정사무관·검찰사무관 또는 검사	3	3
행 정 사 무 관 또 는 검 찰 사 무 관	2	-
행 정 주 사 또는 검 찰 주 사	2	-
행 정 주 사 보 또는 검 찰 주 사 보	2	2
전 산 주 사 보	1	1
기 록 연 구 사	1	-

제 3 절 예산과 시설

제 1 항 예 산

1. 개 요

2016년도 법무부 예산은 법무행정의 비전인 '반듯한 사회, 행복한 국민' 구현을 위해 법질서 확립 및 준법문화 정착을 위한 재정적 지원 강화, 범죄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

하여 안전한 사회 조성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 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교도작업 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이 전년보다 2.5% 증액된 1조 8,887억 6,100만원, 세출이 6.5% 증액된 3조 1,335억 7,900만원, 범죄피해자 보호기금이 1,077억 8,000만원으로 회계별 내역은 <표 1>과 같다.

<표 1> 2016년도 예산 및 기금

○ 총 규 모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5 예산	2016 예산	2015 대비	
				증△감	%
예산	세 입	1,937,052	1,888,761	△48,291	△2.5
	세 출	2,942,541	3,133,579	191,038	6.5
기금	수 입	91,522	107,780	16,258	17.8
	지 출	91,522	107,780	16,258	17.8

○ 일반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5 예산	2016 예산	2015 대비	
				증△감	%
세 입		1,860,334	1,801,455	△58,879	△3.2
세 출		2,885,181	3,046,273	161,092	5.6

○ 교도작업 특별회계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5 예산	2016 예산	2015 대비	
				증△감	%
세 입		57,360	87,306	29,946	52.2
세 출		57,360	87,306	29,946	52.2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5 기금	2016 기금	2015 대비	
			증△감	%
세 입	91,522	107,780	16,258	17.8
세 출	91,522	107,780	16,258	17.8

2. 일반회계

2016년도 일반회계 예산은 세입이 전년보다 3.2% 감액된 1조 8,015억원, 세출이 전년보다 5.6% 증액된 3조 463억원으로 정부 일반 회계 예산 268조 3,872억원에 대한 점유율은 세입이 0.7%, 세출이 1.1%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3조 463억원을 프로그램별로 보면 인건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구성된 행정 지원이 69.4%인

2조 1,506억원, 검찰 활동이 8.2%인 2,490억원, 교정활동이 7.9%인 2,421억원이며, 기타 법무 활동·출입국관리·범죄예방활동·법무교육 훈련·법무시설조성 등 8개 프로그램이 13.3%인 4,046억원이다.

주요 경비별·사업비별·프로그램별 예산 내역은 <표 2> 내지 <표 4>와 같다.

<표 2>

주요 경비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5 예산	2016 예산	2015 대비	
			증△감	%
계	2,885,181	3,046,273	161,092	5.6
인 건 비	1,879,807	1,976,343	96,536	5.1
기 본 경 비	136,974	137,692	718	0.5
사 업 비	782,386	837,382	54,996	7.0
기금전출금	86,014	94,856	8,842	10.3

〈표 3〉

사업비 예산내역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15 예산	2016 예산	2015 대비	
			증△감	%
계	782,386	837,382	54,996	7.0
○ 국가송무수행 및 공익법무관운영	4,365	4,723	358	8.2
○ 국가배상금지급	40,000	55,000	15,000	37.5
○ 국제거래 및 국제통상법률지원	1,371	1,382	11	0.8
○ 개발도상국 법제정비지원(ODA)	580	171	△409	△70.5
○ 기업환경지수 개선	348	331	△17	△4.9
○ 국제투자분쟁 중재수행 및 대응	11,234	3,438	△7,796	△69.4
○ 국민편익증진 법제정비	1,663	1,339	△324	△19.5
○ 민상사업법지원선진화(정보화)	492	-	△492	△100.0
○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기업법제선진화	731	3,095	2,364	323.4
○ 변호사시험 및 사법시험 관리	4,256	4,221	△35	△0.8
○ 정부법무공단운영 지원	512	486	△26	△5.1
○ 공증제도운영 및 활성화	397	398	1	0.3
○ 변호사제도의 선진화	875	1,381	506	57.8
○ 통일대비 법률통합 실질화	450	444	△6	△1.3
○ 법률구조	39,732	45,565	5,833	14.7
○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2,356	2,449	93	3.9
○ 인권교육	194	219	25	12.9
○ 법무·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양성평등교육	121	135	14	11.6
○ 아동인권증진(신규)	180	180	-	-
○ 이민정책개발지원	315	317	2	0.6
○ IOM이민정책연구원운영	1,273	1,301	28	2.2
○ 출입국사무소시설운영	24,173	24,917	744	3.1
○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입대체경비	4,009	3,841	△168	△4.2
○ 외국인보호관리	10,040	10,502	462	4.6
○ 외국인사회통합지원	3,967	6,692	2,725	68.7
○ 체류외국인 동향조사	7,371	7,953	582	7.9
○ 외국인종합안내센터운영	3,228	3,600	372	11.5

사 업 명	2015 예산	2016 예산	2015 대비	
			증△감	%
○ 사회통합프로그램이수제운영	5,735	5,958	223	3.9
○ 검찰청시설운영	35,256	36,591	1,335	3.8
○ 검찰국외훈련 및 국제형사협력지원	5,816	5,666	△150	△2.6
○ 과학수사 인프라 구축	6,353	7,200	847	13.3
○ 국제형사협력지원(ODA)	648	782	134	20.7
○ 검찰업무정보화(정보화)	28,194	29,809	1,615	5.7
○ 첨단범죄맞디지털수사(정보화)	14,515	13,649	△866	△6.0
○ 검찰수사지원	10,017	10,691	674	6.7
○ 수사일반	61,337	66,428	5,091	8.3
○ 공안수사	5,352	5,418	66	1.2
○ 국민생활침해사범단속	12,160	13,633	1,473	12.1
○ 마약수사	3,398	3,598	200	5.9
○ 성범죄 등 4대악 사범 단속	5,145	5,133	△12	△0.2
○ 안전비리 등 민관유착비리사범	6,827	8,642	1,815	26.6
○ 공소유지	4,406	4,673	267	6.1
○ 형집행 및 범죄수익 환수	10,721	11,568	847	7.9
○ 형사보상	20,000	25,000	5,000	25.0
○ 형사법정비	412	472	60	14.6
○ 교도소행정지원	18,274	19,424	1,150	6.3
○ 교정시설 수용관리 및 공공요금	160,747	169,229	8,482	5.3
○ 교정시설장비운영 및 현대화	44,066	45,296	1,230	2.8
○ 교정교화	9,088	8,165	△923	△10.2
○ 소년원및치료감호소시설운영	1,984	2,323	339	17.1
○ 보호관찰소시설운영	4,933	4,862	△71	△1.4
○ 소년원생수용	15,194	15,661	467	3.1
○ 청소년비행예방	4,836	4,984	148	3.1
○ 갯생보호활동	24,147	24,831	684	2.8
○ 치료감호자수용관리	6,095	6,964	869	14.3
○ 보호관찰활동	8,683	9,034	351	4.0
○ 특정범죄관리	10,345	13,657	3,312	32.0

사 업 명	2015 예산	2016 예산	2015 대비	
			증△감	%
○ 법질서 준수 및 법교육 활동	3,773	5,231	1,458	38.6
○ 기타법무시설 개보수 및 확충	16,697	14,922	△1,775	△10.6
○ 법무시설 및 장비관리	8,571	8,542	△29	△0.3
○ 연수원시설관리 및 교육시설장비현대화	5,182	3,280	△1,902	△36.7
○ 법무·검찰공무원 등 교육운영 및 개선	1,360	1,488	128	9.4
○ 로스쿨 출신 신입검사 교육 및 로스쿨 지원	962	962	-	-
○ 법무연수원 수입대체경비	473	549	76	16.1
○ 행정효율성증진 및 능력개발	755	717	△38	△5.0
○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민원·정책 피드백	142	135	△7	△4.9
○ 정책연구개발사업(R&D)	48	48	-	-
○ 법무행정정보화(정보화)	27,436	27,960	524	1.9
○ 서민·사회적약자 지원 법무정책 홍보	879	889	10	1.1
○ 형사사법공동시스템 운영(정보화)	7,191	7,987	796	11.1
○ 특별감찰활동	-	1,250	1,250	순증

〈표 4〉

프로그램별 예산내역(세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5 예산	2016 예산	2015 대비	
			증△감	%
계	2,885,181	3,046,273	161,092	5.6
○ 법무 활동	67,274	76,409	9,135	13.6
○ 인권 활동	42,583	48,548	5,965	14.0
○ 출입국 관리	60,111	65,081	4,970	8.3
○ 검찰 활동	230,557	248,954	18,397	8.0
○ 교정 활동	232,175	242,114	9,939	4.3
○ 범죄 예방 활동	79,990	87,547	7,557	9.4
○ 법무시설 조성	25,268	23,464	△1,804	△7.1
○ 특별감찰관활동	-	2,405	2,405	순증
○ 법무 교육 훈련	7,977	6,279	△1,698	△21.3
○ 행정 지원	2,053,232	2,150,616	97,384	4.7
○ 기금 전출금	86,014	94,856	8,842	10.3

3. 교도작업특별회계

2016년도 세입과 세출예산은 동일하게 873억 600만원이며, 세입예산은 작업생산품 판매수익 596억 1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70억 7,700만원, 작업부산물 판매수입 3억 1,800만원, 기금예탁원금회수 97억 7,000만원, 기금예탁

이자수입 5억 4,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기본경비 5억 9,000만원, 교도작업 456억 9,300만원, 직업훈련 34억 5,300만원, 시설보완 22억 1,500만원, 예비비 5억원, 공공자금 관리기금예탁 348억 5,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표 5>와 같다.

<표 5>

가. 세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5 예산	2016 예산	2015 대비	
			증△감	%
계	57,360	87,306	29,946	52.2
교도작업수입	44,537	59,601	15,064	33.8
전년도이월금	301	17,077	16,776	5573.4
잡 수 입	309	318	9	2.9
기금예탁원금회수	11,952	9,770	△2,182	△18.3
기금예탁이자수입	261	540	279	106.9

나. 세 출

(단위 : 백만 원)

사 업 명	2015 예산	2016 예산	2015 대비		내 역
			증△감	%	
계	57,360	87,306	29,946	52.2	
기본사업비	661	590	△71	△10.7	· 운영비 등 590
교 도 작 업	37,461	45,693	8,232	22.0	· 작업재료비 19,551 · 보 상 금 19,146 · 일반수용비 등 6,996
직 업 훈 련	3,139	3,453	314	10.0	· 훈련재료비 1,924 · 훈련강사료 554 · 일반수용비 등 975
시 설 보 완	4,429	2,215	△2,214	△50.0	· 공장 개· 보수 등 1,115 · 작업장비구입비 1,100
예 비 비	1,900	500	△1,400	△73.7	
공공자금관리 기금예탁금	9,770	34,855	25,085	256.8	

4. 범죄피해자보호기금

2016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수입 및 지출은 동일하게 1,077억 8,000만원이며, 수입은 변상금 2억 2,3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948억 5,600만원,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127억 100만원이고, 지출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

365억 1,400만원, 여가부 범죄피해자보호 345억 5,400만원,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보호 156억 2,800만원, 운영비 4,900만원, 여유자금 210억 3,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표 6>과 같다.

〈표 6〉

가. 수 입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5 기금	2016 기금	2015 대비	
			증△감	%
계	91,522	107,780	16,258	17.8
변 상 금	118	223	105	89.0
통 화 금 융 기 관 예 치 금 회 수	5,390	12,701	7,311	135.6
전 입 금	86,014	94,856	8,842	10.3

나. 지 출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15 기금	2016 기금	2015 대비		내 역
			증△감	%	
계	91,522	107,780	16,258	17.8	
법무부 범죄 피해자보호	29,170	36,514	7,344	25.2	▶ 범죄피해자 치료 및 자립 지원, 형사조정 활성화, 범죄 피해구조금 등 6개 사업
여가부 범죄 피해자보호	33,771	34,554	783	2.3	▶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지원
보건복지부 범죄피해자 보호	19,542	15,628	△3,914	△20.0	▶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운 영 비	51	49	△2	△3.9	
여 유 자 금	8,988	21,035	12,047	134.0	

제 2 항 시 설

1. 개 요

검찰·보호·교정·출입시설 등 각 시설별 사무환경의 특성에 맞는 ‘고객중심의 맞춤형 법무시설 조성’을 목표로 설정하고, 중기 재정 및 연도별 사업계획에 따라 노후·협소시설 개선 및 대응감방 해소를 위한 법무시설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효율적인 법무행정 수행 기반을 구축하였다.

새롭게 조성한 청사 등 법무시설은 설계 과정에서부터 업무수행의 기능 중심에서 벗어나 시설의 사용자와 이용자의 편리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 지역사회 및 주민과의 친화를 위한 요소를 적극 도입하여 법무시설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2. 국민 편의를 지향하는 법무시설 조성

법무시설 청사 전면 외곽 담장 낮추기, 체육시설 주민개방, 교정시설의 청사 미관 개선 및 아름다운 주벽과 녹지 가꾸기 등으로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는 주민친화형 법무시설을 조성하였다.

또한, 지열 및 태양광 발전설비 등 신·재생 에너지 도입 확대, 고효율 에너지기기 적용 등 건물 에너지 1등급의 친환경 그린 법무시설을 조성하였다.

3. 법무시설 조성사업 단계별 추진상황

준공사업은 대구고검 보육시설 및 직원숙소 신축, 경주지청 별관 신축, 광주소년원 리모델링,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축, 진주보호관찰 지소 신축, 제주교도소 수용동 신축, 제주교도소 증축, 강릉교도소 수용동 증축, 제주출입국관리 사무소 신축으로 9개 사업을 연도 내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신규사업은 의정부지검 제2신관 증축, 전주지검 신축, 전주소년원 신축, 영덕준법 지원센터 신축, 대구교도소 신축, 속초교도소 신축, 청주외국인보호소 행정동 증축으로 총 7개 사업을 착공하였다.

계속사업은 검찰특수기록관 신축, 천안지청 신축, 부산지검 서부지청 신축, 청주소년원 리모델링, 거창구치소 신축, 경북북부교도소 비상대기소 증축으로 총 6개 사업을 계속 추진 중 이다.

그 밖에 서울시 송파구 문정도시개발지구 내에 서울동부 지검(17. 3. 업무개시), 서울 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구치소, 비상대기 숙소, 어린이집 등 5개 시설을 서울시 SH공사에서 조성하여 국유 재산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14년부터 계속 추진 중에 있다.

법무시설 조성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는 총 897억원으로 검찰시설에 366억원(40.8%), 보호시설에 93억원(10.3%), 교정시설에 289억원(32.3%), 출입국관리시설에 149억원(16.6%)을 집행하였다.

2016년도에 시행한 주요 법무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실적은 <표 7>과 같다.

〈표 7〉 2016년도 주요 법무시설 조성공사 추진실적

(단위 : 억 원)

구분	공 사 명	규모(m ²)		소요예산	공사기간
		부지	건물		
준공 (9)	대구고검 보육시설 및 직원숙소 신축	925	1,074	35	'15.11.~'16.07.
	경주지청 별관 신축	6,122	1,994	55	'14.12.~'16.04.
	광주소년원 리모델링	70,518	2,719	37	'14.12.~'16.07.
	부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 신축	14,885	4,642	121	'14.12.~'16.07.
	진주보호관찰지소 신축	2,253	1,694	34	'15.04.~'16.03.
	제주교도소 수용동 증축	기존부지	1,552	34	'14.12.~'16.05.
	제주교도소 증축	67,797	419	10	'15.10.~'16.05.
	강릉교도소 수용동 증축	110,509	1,885	41	'15.12.~'16.12.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축	7,194	2,994	68	'14.09.~'16.01.
신규 (7)	의정부지검 제2신관 증축	17,530	422	9	'16.12.~'17.06.
	전주지검 신축	33,235	26,265	353	'16.12.~'19.10.
	전주소년원 신축	34,756	9,013	140	'16.12.~'18.12.
	영덕준법지원센터 신축	1,617	1,296	29	'16.07.~'17.05.
	대구교도소 신축	280,572	60,760	1,746	'16.03.~'19.12.
	속초교도소 신축	141,543	19,492	334	'16.07.~'19.06.
	청주외국인보호소 행정동 증축	22,507	2,056	63	'16.12.~'18.06.
계속 (6)	검찰특수기록관 신축	6,610	9,326	211	'14.12.~'17.09.
	천안지청 신축	23,140	16,506	707	'14.12.~'17.10.
	부산지검 서부지청 신축	18,182	21,847	654	'15.10.~'17.02.
	청주소년원 리모델링	33,800	5,706	103	'15.10.~'17.03.
	거창구치소 신축	160,818	19,844	816	'15.12.~'18.10.
	경북북부교도소 비상대기소 증축	12,350	4,251	98	'15.12.~'17.05.
교환 사업	문정 법무시설 신축*	68,336	132,433	2,007	'14.08.~'17.02.
위탁 사업	수원고·지검 신축	33,924	68,962	2,133	'16.11.~'19.01.

* 서울 SH공사 추진 : 서울동부지검, 서울동부보호관찰소, 서울동부구치소